

#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안내 매뉴얼

제정 2022. 7. 6.

개정 2023. 9. 8.

※ 본 자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안내자료입니다.

2023. 9. 8.

감사부 청렴윤리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목 차



I.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요 .....	1
-----------------------	---

II. 임직원이 해야 하는 3가지 신고·제출 의무 .....	5
-----------------------------------	---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신청 ....	5
---------------------------------	---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신고 .....	12
-------------------------	----

③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15
----------------------	----

III. 연구개발 이해충돌 유형 및 사례 .....	18
------------------------------	----

①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구분 .....	18
--------------------------	----

② 연구자등의 직무 유형별 예시 및 관련 법령 ...	19
-------------------------------	----

# I.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요

## 1 관 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1. 5. 18. 제정, '22. 5. 19.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21. 12. 31. 제정, '22. 5. 19.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2. 5. 19. 시행)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2. 5. 19. 시행)
-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23. 1. 1. 시행)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규정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폐지하고 원규로 상향화하여 제정

##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
-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3 이해충돌의 정의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4 적용대상

- 연구원 소속 전 임직원

## 5 직무관련자

- 임직원이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를 말함

< 이해충돌방지법 상 직무관련자 >



## 6 사적 이해관계자

구분	세부내용
1	<p>○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p> <p><b>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li> <li>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li> <li>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li> </ul> <p>※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p> <p>-----생계를 같이하는 경우</p>

구분	세부내용
2	○ 임직원 <b>자신</b> 또는 그 가족이 <b>임원·대표자·관리자</b> 또는 <b>사외이사</b> 로 <b>재직</b> 하고 있는 <b>법인·단체</b>
3	○ 임직원 <b>자신</b> 이나 그 가족이 <b>대리</b> 하거나 <b>고문·자문</b> 등을 제공하는 <b>개인·법인·단체</b>
4	○ 임직원으로 <b>채용·임용</b> 되기 전 <b>2년 이내</b> 에 임직원 <b>자신</b> 이 <b>재직</b> 했던 <b>법인·단체</b>
5	○ 임직원으로 <b>채용·임용</b> 되기 전 <b>2년 이내</b> 에 임직원 <b>자신</b> 이 <b>대리</b> 하거나 <b>고문·자문</b> 등을 제공했던 <b>개인·법인·단체</b>
6	<p>○ 임직원 <b>자신</b> 또는 그 가족이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b>일정 비율</b> 이상의 <b>주식·지분, 자본금</b> 등을 소유하고 있는 <b>법인</b> 또는 <b>단체</b></p> <p>*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임직원 <b>자신</b>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소유하는 비율 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lt;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의 기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b>자신</b>이나 그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b>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b>을 소유하고 있는 <b>법인</b> 또는 <b>단체</b></li> <li>• 임직원 <b>자신</b>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b>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b>을 소유하고 있는 <b>법인</b> 또는 <b>단체</b></li> <li>• 임직원 <b>자신</b>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b>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b>을 소유하고 있는 <b>법인</b> 또는 <b>단체</b></li> </ul> </div>
7	<p>○ 최근 <b>2년 이내</b>에 <b>퇴직</b>한 <b>임직원</b>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직무</b>를 수행하는 <b>임직원</b>과 같이 <b>근무</b>하였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시험·인증·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li> <li>2)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li> <li>3)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li> <li>4) 연구원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li> <li>5) 임직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li> <li>6) 연구원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li> <li>7) 연구원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li> <li>8) 연구원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li> </ol>
8	<p>○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li> <li>2)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의 거래 상대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기준으로 정하는 자</li> </ol>

## 7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임직원의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1 사적이해관계자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2 가족 채용 제한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단, 연구원의 경우 부동산 업무 소관 기관이 아님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이 아님**
- \* 본 매뉴얼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3가지 신고·제출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 \* 본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 금지 행위**의 경우, 원규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함**(※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시행중)

## II. 임직원이 해야 하는 3가지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 (주요내용)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 (적용대상)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검정·시험·인증·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연구원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임직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연구원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연구원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연구원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신고·신청 방법)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으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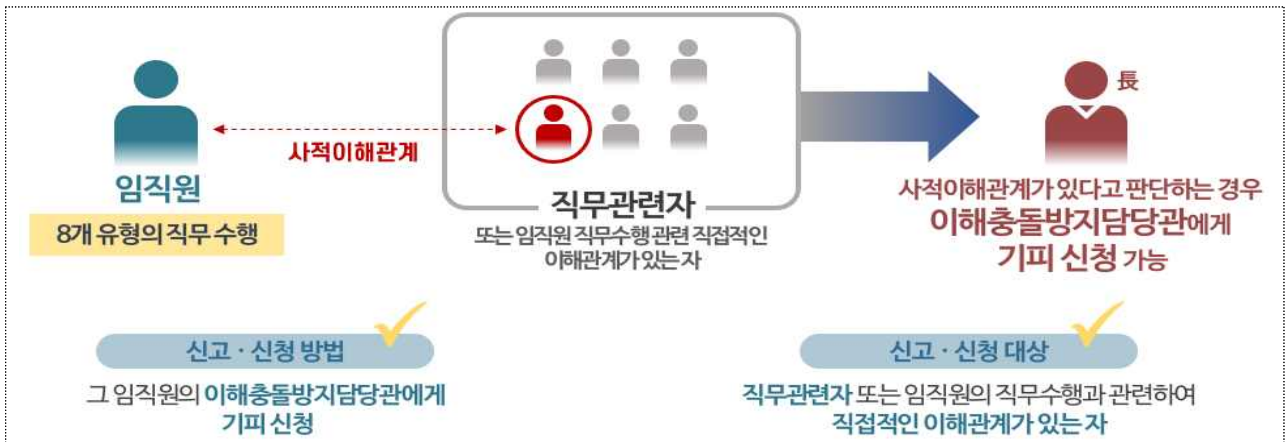
\*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s://ep.clean.go.kr>)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업무 > 의무신고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





## <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시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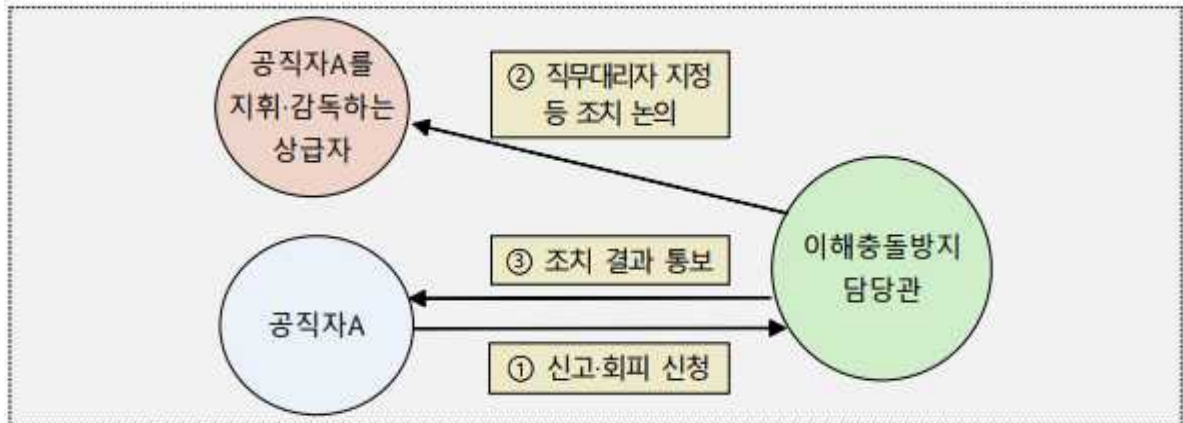
- (접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부장)은 이를 접수함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
<p>■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별지 제1호 서식]</p> <p><b>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b></p> <p>· 어부초 단 [ ]은 신고 신청인이 작성하기 위하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표시를 합니다. (일 부)</p> <p>접수번호 [ ] 신고일 [ ] 회피일 [ ]</p> <p>신고 신청인 [ ]</p> <p>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 ]</p> <p>참고자료 [ ]</p> <p>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신청인 [ ] (인)</p>	<p>■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별지 제6호 서식]</p> <p><b>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b></p> <p>· 어부초 단 [ ]은 신청인이 작성하기 위하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표시를 합니다. (일 부)</p> <p>접수번호 [ ] 신청일 [ ] 회피일 [ ]</p> <p>신청인 [ ]</p> <p>직무관련자 [ ]</p> <p>신청하는 조치 유형 [ ]</p> <p>신청 사유 [ ]</p> <p>년 월 일</p> <p>신청인 [ ] (인)</p>



- (조치·통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부서장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함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및 특성 전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3조)신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6조)

■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임직원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직위(직급)
	소속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겸용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임직원 대체 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검열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한불도인

## □ 회피 직무 범위, 회피 의무의 발생·종료 시점, 회피 철회

### ○ (회피 직무의 범위) 신고·회피한 업무 및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일체

-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함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결정의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임직원이 자신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신고·회피 신청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언론 대응, 국회 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회피해야 함

※ (사례) 공직자A는 자신이 맡은 부패신고 조사 사건의 신고자가 퇴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상급자였던 사람(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대응 등 업무에서도 회피해야 함

### ○ (회피 의무 발생 시점) 임직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 부터 회피 의무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 안 날이란, 사건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
- 신고·고발 접수 등으로 업무 개시 시점이 명확한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해당 신고·고발이 있음을 안 날부터 회피 의무 발생
- 직권조사 등으로 업무 개시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공직자 본인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높다면, 해당 업무 착수 시점부터 회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 해당 업무 수행직원의 범위는 해당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부터 결재권자까지 모두 포함되며, 특히 결재권자는 조사 대상 범위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 착수 전 신고·회피할 필요가 있음

- (의무 종료 시점) 신고·회피한 업무 관련 내부 검토 및 의사 결정 종결 시점
  - 직원이 회피한 직무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종결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직원의 회피 의무가 있음
  - 직원이 신고·회피한 업무가 종결된 경우, 직원은 해당 업무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언론 대응 등 가능
- (회피 신청 철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조치 후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 의무적 회피 사항(「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5조)은 신고·회피 신청 후, 철회할 수 없음
  - 자발적 회피 사항(「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5조)은 신고·회피 신청 후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는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음

\* 소속기관장이 신고·회피 신청한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를 말함

## □ 신고 후속 조치

**위반자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1조, 제26조, 제28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직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환수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조치



## □ 신고·제출 의무 FAQ

**Q**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임용된 후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하는지?

**A** A의 자녀는 A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직무관련자)이며, A는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인 자녀가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Q** ○○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A)에 재직 중인 임원B가 ○○부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경우, B는 준정부기관A와 관련된 직무를 항상 회피해야 하는지

**A** 준정부기관A는 공직자B가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로서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B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따라서 공직자B가 ○○부에서 준정부기관A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을 해야함

**Q**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A가 항공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국내 항공사B의 주식 보유가 제한되는지?

**A** 입법조사관A 또는 그 가족이 항공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 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라 항공사B는 입법조사관 A의 사적이해관계자이며, 국회교통위원회 피감 기관으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입법 조사관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함

**Q** 공직자B는 법령에 따라 ○○부 A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직자B를 지휘·감독하던 국장으로 1년 전 퇴직한 공직자 C를 A심의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 하는지?

**A** 공직자B는 법 제5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A심의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퇴직 공직자C는 A의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이므로 공직자B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를 해야함

**Q** 공직자B는 법령에 따라 ○○부 A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직자B를 지휘·감독하던 국장으로 1년 전 퇴직한 공직자 C를 A심의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 하는지?

**A** 공직자B는 법 제5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A심의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퇴직 공직자C는 A의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이므로 공직자B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를 해야함

**Q**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언제를 말하는지?

**A**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함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해당 공직자가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는 소속기관과 관련 수사 기관에 있음

**Q** 인사담당 부서장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의 직무를 할 수 없는지?

**A**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담당 부서장의 직무 자체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인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Q** ○○시 시장이 퇴직 후 ○○시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가 필요한지?

**A** 기관장의 경우 법 제2조제6호사목에 따라 재직 중 같이 근무했던 기관 소속의 전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가 됨. ○○시 소속 공직자A가 시장 재직 중 같이 근무했으며, 시장이 퇴직한 후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하고 회피신청을 해야함

**Q** ○○공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회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임직원이 학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 행사에 ○○공사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A** ○○공사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회는 해당 임직원의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하고, 임직원의 직무는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된 직무’이며, 학회는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받는 단체로 직무관련자이므로 해당 임직원은 관련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함

**Q** ○○시 지방의회의원 A가 임기개시 2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B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 심의·의결에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하는지?

**A**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B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B단체에 재정적 이익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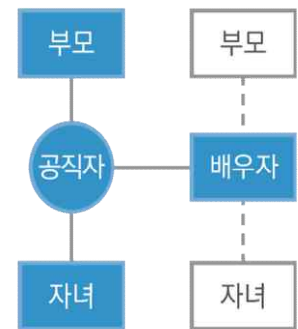
##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신고

- (주요내용) 임직원은 신고대상자가 임직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적용대상) 임직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임직원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특수관계사업자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포함



\* 단, 임직원과 직무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특수관계사업자

-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신고대상 거래행위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단,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

- 그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단,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 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 (신고·신청 방법) 임직원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사실을, 서면 또는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으로 신고

\*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s://ep.clean.go.kr>)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업무 > 의무신고

\* 단,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신고서(양식)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칸(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임직원
	②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신고 FAQ

Q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되기 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신고 의무 발생

Q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공직자와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이자의 지급 여부는 신고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Q

직무관련자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의 거래 행위가 제한되는지?

A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의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경제적 거래로 인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직무재배정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Q

○○기관 과장A가 지휘·감독하는 직원인 B에게 금전을 대부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원 B는 과장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이므로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금전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관련 판례

뇌물죄로 형사처벌하는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와 단순히 금전을 거래하는 것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제3자가 보기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의심할 여지를 원천 봉쇄하여 공직 기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신 풍조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OO시 공직자B가 OO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징계 처분은 타당(서울고등법원, 2014누1012)

보호관찰소 공직자A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아들의 음악 오디션 비용에 필요하다며 100만원을 빌리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징계 처분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613)

### 3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주요내용)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함(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 (적용대상) 연구원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가 된 임직원
  - 퇴직자: 임직원이 연구원에서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고 예외) 사회 상규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타 신고의무와의 관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연구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상 다른 신고·제출의무 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이나 원규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필요



### 타 신고의무 예시

- 허가담당 공무원 A가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허가신청자(직무관련자) B와 골프를 치게 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을 경우 행동강령 제5조의6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함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 (신고·신청 방법)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면 또는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으로 신고

\*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s://ep.clean.go.kr>) >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업무 > 의무신고

\* 단,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양식)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①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신고인 [ ] 퇴직 직원 [ ] 기타( )
참고자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FAQ

Q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A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는 사적 접촉 자체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한 경우 모임의 성격에 관계없이 신고해야함

Q

퇴직자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퇴직자의 손주 돌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3가지 경우 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A

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의 3가지 유형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음

Q

퇴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사적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연구용역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연구 프로젝트(최종 결과보고서 검수, 보완 및 연구비 정산 등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용역 담당 공직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퇴직자는 더 이상 직무 관련자가 아니므로 사적 접촉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음

Q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A

법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후 기관의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III. 연구개발 이해충돌 유형 및 사례

#### 1 연구개발 이해충돌의 유형 구분

##### ① 발생 원인에 따른 구분

- 연구개발 이해충돌은 금전적 이해충돌, 직무적 이해충돌, 인적 이해충돌, 지적 이해충돌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전적 이해충돌〉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li> </ul>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기업으로부터 급여 또는 보수를 받거나 출장비, 선물 등을 받는 경우</li> <li>특정 기업과 관련한 주식, 스톡옵션,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li> <li>기업 등 영리기관으로부터 고용, 이사직, 자문 등의 역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li> <li>특정 영리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문료, 강의료 등을 받는 경우</li> <li>이사직, 자문 등의 역할을 맡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의 평가/자문을 맡은 경우</li> </ul>

##### 〈직무의 충돌〉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 기관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외부 파견, 외부 강연, 외부 조직(기업) 자문, 개인적 위탁과제 수행, 창업 등</li> </ul>

##### 〈인적 이해충돌〉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li> </ul>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경우</li> <li>연구과제의 결과물(논문, 보고서 등)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하는 경우</li> <li>각종 심사, 평가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li> </ul>

##### 〈지적 이해충돌〉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li> </ul>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널 심사 등에 있어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편향, 특정 결과의 지향 등과 반대되거나 경쟁하는 연구 논문을 심사하게 된 경우</li> </ul>



## ② 이해충돌 관련 법령 구조에 따른 구분

- 이해충돌 유형을 적용 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기준으로 재정리하면 크게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자등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유형은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③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⑥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⑦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임
-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유형은 ⑧ 가족 채용 제한, ⑨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임

〈이해충돌 대응 방안〉		
구분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연구자등 개인 차원의 대응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5조, 제15조
	과학기술 관련 특구 부동산 보유·신고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제14조
	민간기관 재직자 공무수행사인 활동시 의무	제16조
연구기관 차원의 대응	재직자 가족채용 제한	제11조
	재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	제12조

## 2 연구자등의 직무 유형별 예시 및 관련 법령

### □ 이해충돌 관련 법령 구조에 따른 구분

- 연구원 임직원은 ① 연구수행직무뿐만 아니라 ② 교육직무, ③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실험실 창업 주체로서의 직무, ④ 계약 등 연구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직무 유형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가능 상황과 적용 가능 법령의 예시】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예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사적관계 신고/채용 제한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임직원의 개인적 친분, 갈등, 금전적 이해관계 등 사적인 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 유형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b> 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을 참여시키는 경우</li> <li>○ <b>(교육)</b> 연구원 명의 포상, 상벌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li> <li>○ <b>(실험실 창업·계약)</b> 연구기관이 실험실창업기업과의 협력 연구 수행시 연구자가 창업연구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계약조건을 차별화 하는 경우</li> <li>○ <b>(평가·파견)</b> 평가, 파견자 선발과정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li> </ul>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재산보유/ 거래·계약/ 비밀이용/ 사례금 수수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연구자의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유형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b> 연구자가 사회이사직을 맡은 회사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해당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li> <li>○ <b>(교육)</b> 배우자의 사업에 금전적 혜택을 준 회사를 위해 자신의 연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려주는 경우</li> <li>○ <b>(자문)</b> 영리기관으로부터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받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li> <li>○ <b>(실험실창업·계약)</b> 실험실창업 후 후속발명으로 발명된 연구개발성과를 소속 연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li> </ul>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예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업무범위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연구자가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 유형별 예시	○ (교육·자문)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무료 외부 자문을 하는 경우		
위원회활동/파견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인 경우	제16조(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1조(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직무 유형별 예시	○ (평가·심사) 연구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소속 기관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참고자료: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관련 이해충돌 상황 예시】**

- 연구자가 창업(휴직) 전(前)에 연구원의 시설, 장비, 인프라 등을 활용하거나 과거의 연구 과제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원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창업(휴직) 후(後)에 창업기업 명의 또는 연구자 개인명의로 해당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사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 특허 출원이 용이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원의 과제로 진행하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연구원 보유의 시설 및 장비를 허가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연구원 소유의 특허를 허가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연구자의 창업 활동으로 인해 연구자가 연구 활동 및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자의 창업 활동으로 연구자가 담당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UST 겸임교수)